

## 우리나라의 지역소득통계(Regional Income Statistics) 구축현황 및 개선방향

강민규(국토연구원 연구원)

- 지역소득통계(Regional Income Statistics)는 지역의 현황 및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기초정보이자, 지역정책을 기획, 수립, 집행,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
  -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,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효율적 정책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역소득통계의 개발과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
-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지역소득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기초자료 미비,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생산, 분배, 지출계정의 소득통계 구축수준이 서로 다른 실정임
  - 지역소득통계의 기초자료 중 상당수는 시·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, 균일한 수준의 통계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·지방 간 공조가 필수적

### | 정 | 책 | 적 | 시 | 사 | 점 |

- 1 국민소득과 지역소득통계 간에 존재하는 자료편차의 해소와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두 자료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며,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원화된 작성·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
- 2 분기별로 공개되는 국민소득과 달리, 지역소득은 현재 연간 단위로 편제되어 매년 연말 이후 발표되고 있으므로 경제지표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짐. 시의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분기별 지역소득통계 추계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통한 자료구축 및 관리가 필요
- 3 지역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집계자료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미시자료가 필요하며, 현재 생산계정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시·군·구 지역소득통계를 분배, 지출계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

# 1. 지역소득통계의 개념 및 필요성

## ● 지역소득통계의 개념과 연혁

- 지역소득통계(Regional Income Statistics)란 한 지역의 가계, 기업,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수치임
  - 지역소득은 국민소득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(SNA)를 토대로 추계하고 있으며, 생산접근방법(생산지역소득), 소득접근방법(분배지역소득), 지출접근방법(지출지역소득)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
  - 생산접근방법으로 추계된 지역의 경제적 성과는 생산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분배되어 분배지역소득을 형성하고, 이렇게 분배된 소득은 다시 소비와 투자가 되어 지출지역소득을 이루게 됨
  - 우리나라의 경우 지출·분배계정에 비해 생산관련 기초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, 주로 생산접근방법을 통해 지역소득을 추계하고 있으며, 이를 지역내총생산(GRDP)이라 일컫음
-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소득통계 작성이 시도된 1960년대 이래로 지역소득통계의 작성주체, 조사범위, 공개여부 등은 구득 가능한 기초자료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
  - 1959년 주한 UN군이 도민소득을 시범적으로 추계한 이래 지역소득통계의 작성주체는 한국은행, 내무부, 통계청 등으로 바뀌어 옴
  - 지역소득통계의 조사범위와 공개여부는 지역감정 선동, 낙후지역 반발 등의 정치적 이유로 변경·축소되기도 하였으며, 이에 따라 정부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기도 함
  - 통계청은 문민정부 등장(1993년) 이후 과거분 자료와 함께 지역소득통계를 공개하였으며, 일부 광역시·도가 자체적으로 이를 조사·발표함

## ● 지역소득통계 구축 및 관리의 필요성

- 지역소득통계는 지역의 현황 및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기초정보이자, 지역정책의 기획, 수립, 집행,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
  - 예컨대 지역내총생산(GRDP)은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을 파악하게 해줌으로써, 해당 지자체의 산업구조와 특화수준을 보여주고,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됨

- 또한 중장기 예산 수립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한 예산추계가 가능해져 예산과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
  - 지역소득통계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전략과 국정과제의 정책효과를 정확히 평가·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
-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현황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
-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전략 등 주요 국정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, 지역소득통계는 그 근간을 이룸

## 2. 해외 주요국의 지역소득통계 구축체계

- 주요국의 중앙통계기관은 표본설계, 조사방법, 전산시스템 구축과 같은 기술지원을 수행하고, 지방정부는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위탁통계업무를 수행
- 독일, 캐나다의 경우 지역소득통계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기초통계를 단일의 통계생산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계하는 ‘집중형 통계제도’를 시행
  - 미국, 프랑스, 일본의 경우 개별 부처가 당해 소관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‘분산형 통계제도’를 시행

[ 표 1 ] 주요 선진국의 지역소득통계 관리현황

구 분	지역소득통계 작성체계	유형 <sup>주)</sup>
미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무부 센서스국 산하 통계사무소 및 주·지방정부 통계부서가 협력하여 지역통계를 작성</li> <li>• 통계사무소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아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실시</li> </ul>	분산형
독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방통계청은 국가통계 작성 및 지방에 대한 기술지원, 지방정부는 지방통계 작성담당</li> <li>• 각 지방정부의 통계청에서 자체통계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가통계 자료를 수집</li> </ul>	집중형
프랑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립통계경제연구원 산하 22개 지방사무소가 지역통계에 대한 기술지원 및 통계취합</li> <li>• 국가통계정보심의회를 통해 각 통계자료별 취합기준을 설정하고, 자료 간 조정 수행</li> </ul>	분산형
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통계청 산하 8개 지방사무소가 지역통계업무를 전담</li> <li>• 통계청은 국가 통계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·관리</li> </ul>	집중형
일 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자체는 지역통계생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</li> <li>• 지자체는 중앙의 위임통계업무와 지역통계 작성을 수행</li> </ul>	분산형

주: 한국은행, 2003. 지역경제통계 작성현황과 개선방향 참조. 주요 국가의 소득통계 구축체계를 통계자료의 생산·관리 주체에 따라 유형화.

### 3. 우리나라 지역소득통계 구축체계 및 현황

#### ● 지역소득통계 구축체계

- 우리나라는 단일기관(통계청)을 중심으로, 지역소득통계를 비롯한 각 부문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,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작성 체계상 집중형 관리체계에 해당
  - 지역소득통계는 통계법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지정통계<sup>1)</sup>이며, 유·무형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집계자료이므로 방대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함
  - 이러한 기초 통계자료의 상당수가 시·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, 균일수준의 통계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 간 공조가 필수적
- 지역소득통계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나, 기초 자료 미비,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생산, 분배, 지출계정의 소득통계 구축수준이 서로 다른 실정임
  - 생산측면의 지역소득(생산계정)은 1993년 처음 공표되었으며, 16개 광역시·도 단위에서 작성되고 있음. 일부 광역 지자체를 제외하고 시·군·구 단위에서도 생산계정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는 우리나라 지역소득통계의 근간을 이룸
  - 분배측면의 지역소득(소득계정)은 기초자료의 확보, 공개여부 논란 등으로 인해 비교적 최근인 2009년 이후 공표되기 시작했으며, 광역시·도 단위에서만 제공
  - 지출측면의 지역소득(소비계정)은 2001년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, 광역시·도 단위에서만 제공되고 시·군·구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

[표 2] 각 계정별 지역소득통계 구축현황

구분	광역시·도		시·군·구		공개 시점
	제공여부	제공기간	제공여부	제공기간	
생산계정	○	1985~2010년	△ (일부 광역시·도 누락)	2000~2009년 (지자체별 상이)	1993년
분배계정	○	1995~2010년	×	×	2009년
지출계정	○	2000~2010년	×	×	2001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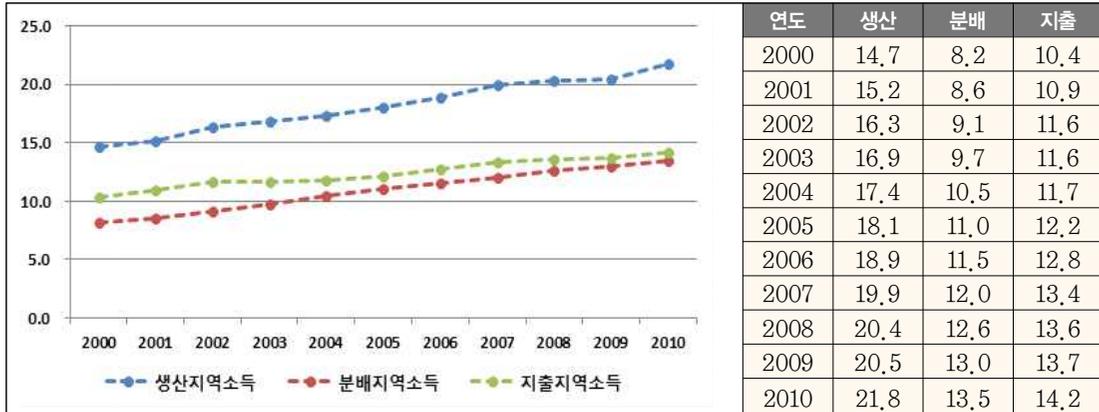
1) 지역소득통계의 일부로서 작성되는 생산계정 및 지출계정이 지정통계에 해당함(승인번호 101128호).

## ● 지역소득통계 변화추이 및 지역별 현황

- 외환위기 극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 이후 10년 간 우리나라의 생산·분배·지출 지역소득은 모든 계정에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
- 다만, 생산계정(148.3%) 및 분배계정(164.6%)의 향상 수준에 비해 지출계정(136.5%)의 회복수준은 더딘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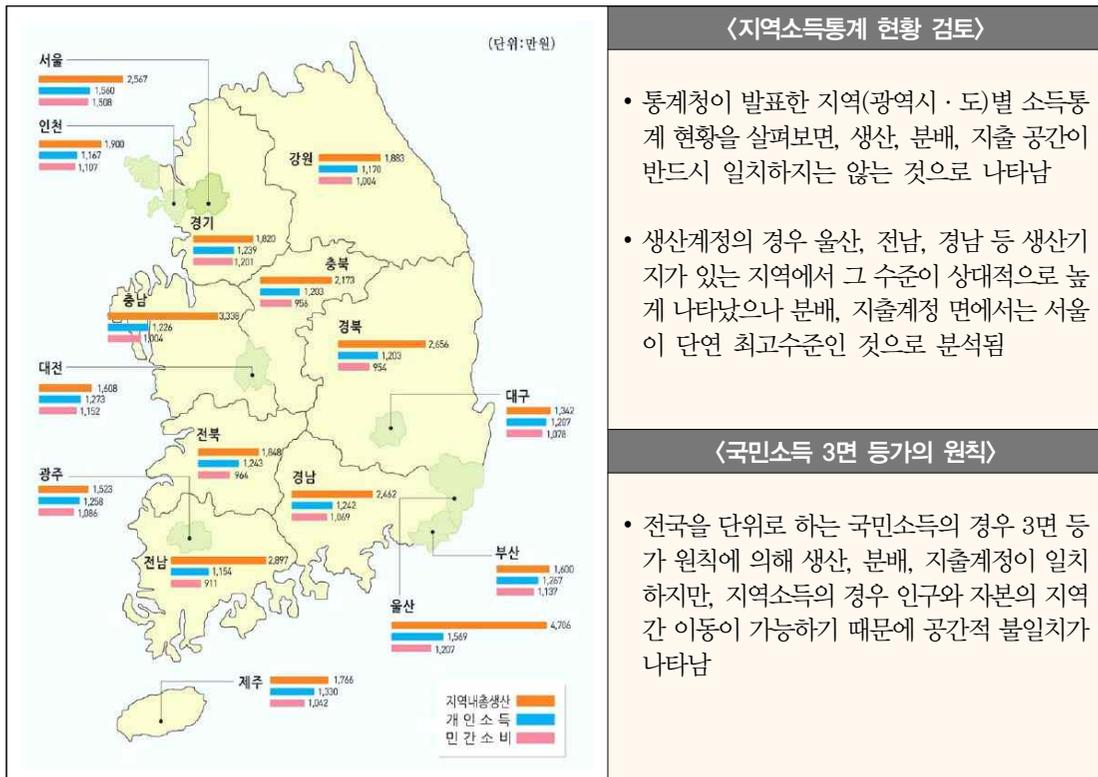
[그림 1] 우리나라 소득통계 변화추이(2000~2010년)

(단위: 백만 원)



주: 통계청(<http://www.kosis.kr>)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, 분배지역소득은 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을 사용

[그림 2] 지역별 소득통계 현황(2010)



## 4. 지역소득통계 개선방향 및 시사점

### ● 지역소득통계 구축체계 및 시스템 개선

#### ■ 국민소득 및 지역소득 통계 간의 편차 해소

-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(한국은행)과 지역소득(통계청) 작성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두 통계 사이에 1~3% 내외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
- 단기적으로 두 자료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며, 장기적인 관점에서서는 현재 이원화된 작성·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

#### ■ 분기별 지역소득통계 구축

- 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는 국민소득과 달리, 지역소득은 현재 연간 단위로 편제되고 있으며, 매년 연말 이후에 발표되어 경제지표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짐
- 시의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소지역 추정법을 비롯한 공통의 분기별 지역소득통계 추계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통한 자료구축 및 관리가 필요

#### 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소득통계 구축

- 지역차원의 명확한 정책판단과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(광역시·도) 단위의 집계자료가 아닌,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 수준의 미시자료가 필요
- 현재 생산계정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시·군·구 지역소득통계를 분배, 지출계정으로 확대·생산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한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 필요

### ● 지역소득통계 개선을 위한 장기적 접근

#### ■ 소득통계의 한계 극복

- GRDP를 비롯한 소득통계는 교통인프라 미비로 인한 사회비용 증대, 질병확산에 따른 의료비 증가,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를 경제적 성과로 집계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
  - ※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한 ‘경제실적과 사회진보 계측을 위한 위원회’에서는 이러한 소득통계 중심의 경제성과 지표를 비판
- 소득통계는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계량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, 국민의 행복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,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함께 검토해야만 함

●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 강민규 연구원 (mgkang@krihs.re.kr, 031-380-0133)